

칠레의 패러독스: Pre-피노체트 세력의 신자유주의 발전전략*

김원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 I. 서론
- II. 신자유주의 모델의 출현
- III. 민선정부의 신자유주의 수용
- IV. 결론

I. 서론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룬 아시아 국가들이 ‘아시아의 용’이라고 불리는 것 처럼, 칠레는 1986년 이래 1997년까지 평균 7%의 고성장을 이루어 ‘라틴아메리카의 표범(Jaguar of Latin America)’이라고 일컬어졌다. 칠레는 주요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20위권 안에 드는 유일한 중남미 국가였으며, 1990년대에는 멕시코와 함께 미주지역 국가들과의 양자간 자유무역 협정 체결에 가장 선두에 섰고, 남미국가 중 가장 먼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가입하고, 역외 교역 상대로서 유럽연합(EU) 및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칠레의 독특성을 낳은 국가전략의 시발점은 1970년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Augusto Pinochet) 집권하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칠레는 개발도상권 국가

* 본 논문은 2002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2-BM2085).

** Won-Ho Kim(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whkim@kiep.go.kr), “Paradox of Chile: Pre-Pinochet Forces Accept Neoliberalism”.

가운데 이미 가장 개방된 경제체제를 갖추었다. 칠레는 1980년대 초 다른 중남미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외채위기에 처하게 되었지만, 1985년 위기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하여 그후 지속적인 안정 경제성장을 거듭해오고 있다. 그러나 칠레의 신자유주의 발전모델은 민주적인 정치질서하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국가전략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었다. 이는 앞선 중도 또는 좌파정권이 단행한 10여년간의 체제개혁을 뒤엎는 혁명이었으며, 피노체트 정권의 무자비한 인권탄압이 없이는 불가능한 변화였다. 따라서 칠레의 정치가 권위주의에서 민주화로 이행하고 나면 이같은 국가발전전략 역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1990년 3월 기독교민주당 출신의 파트리시오 에일윈(Patricio Aylwin)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오늘날까지 3기 연속 중도좌파인 '민주주의정당연합(Concertación de Partidos por la Democracia)' 정권이 들어섰지만 피노체트 독재통치가 남긴 신자유주의 국가전략에는 변함이 없었다. 1990년이래 아르헨티나는 IMF의 금융지원을 5차례, 멕시코는 3차례 받았으나 칠레는 1989년 이래 단 한번도 IMF의 구제금융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과연 칠레의 신자유주의는 post-피노체트 시대에도 견재할 수 있는가? 주변국가의 경우 군부독재의 종식과 함께 신자유주의 역시 단기간이라도 퇴진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칠레의 경우는 왜 일관성이 유지되면서 차별적인가? 왜 Concertación은 빈곤층을 양산하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킨 신자유주의 모델을 유지하는 것인가? 왜 칠레에서는 피노체트라는 독재자가 아직도 상원의원직을 수행하며 우파연합에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인가? 왜 칠레의 민선정부는 권위주의 통치제도 유산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가? 민선정부는 발전전략면에서 군사독재정부와 어떠한 차별성을 추구하고 있는가? 오늘날 칠레의 신자유주의 모델은 사회당 정권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장기간 지속될 것인가? 칠레의 민선정부가 3기를 거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의문에 대한 고찰은 결코 의미가 클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해서 Foxley(1993)나 Munoz & Celedon(1993)

은 칠레의 경제정책과 정치변동과정에 대해 자신들의 정책 관여 경험을 토대로 접근하였지만, 객관성을 잃기 쉬웠다. Oppenheim(1999)은 피노체트의 집권기로 분석의 시야를 넓히기는 하였으나 Pre-Pinochet 세력이 유지하려고 하는 차별성에는 주목하지 못하였다. Silva(1996)는 피노체트 시기의 신자유주의 성향을 ‘급진적 신자유주의(radical neoliberalism)’와 ‘실용적 신자유주의(pragmatic neoliberalism)’로 구분하고 실용적 신자유주의가 피노체트의 정권안정에 기여했다고 지적함으로써 민선정부가 지게 될 신자유주의 수용이라는 부담을 적절히 시사하였다. Fernandez Jilberto(1996)는 차별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대외적인 분야에 국한시켰다. 본 논문은 이러한 다양한 시각의 선행 연구 위에 앞에서 제기한 칠레를 둘러싼 많은 흥미로운 연구문제들을 17년간의 피노체트 정권을 통해 공고화된 신자유주의 발전전략과 그 결과, 기술관료들의 비정치성, 그리고 민선정부들이 이에 대해 갖고 있는 이해관계와, 지속성 속의 차별성을 향한 민선정부의 몸부림에서 풀어보려고 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맥락에서 먼저, 칠레의 신자유주의 국가발전전략이 수립되기 이전의 칠레 정치사회의 특성, 즉 post-피노체트 시대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pre-피노체트 시대의 칠레정치사회의 변동을 투영하고, 그 후 신자유주의 모델을 도입한 이른바 ‘시카고 보이즈’, 그리고 이 모델이 처음 도입된 시기인 1970년대 중반과, 1980년대 금융위기 이후를 먼저 분석해본다. 그리고 1990년대 민선정부 출범 이후 이 모델이 기독교민주당과 사회당 정부에서 어떻게 차별적으로 수용 변천되어 왔는가를, 각 시기별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발전전략으로서의 정착과정에서 발견되는 정치경제적 역동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국가전략의 요소인 정치사회적 안정(security), 경제적 번영(prosperity), 국민적 화합(harmony)에 비추어 유형별로 평가하고자 한다.

II. 신자유주의 모델의 출현

II.1. 칠레사회의 정치화와 개발전략의 혼란

칠레의 1925년 헌법은 칠레 정치발전사에 큰 의미를 남겼다. 이 헌법은 칠레의 전통적인 전략수출품인 질산염 산업의 쇠퇴, 점증하는 노동운동 등 정치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여 대통령 권한의 강화와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특징지어진다. 의회 비례대표제는 계층분화가 심화되는 칠레사회에서 다양한 이념에 입각한 다당의 난립을 야기하였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은 우익, 중도, 좌익의 뚜렷한 3파 분할구도를 불러왔다. 결국 1932~1973년의 기간은 칠레의 민주주의가 번성한 시기로서 칠레정치가 3개 정파간의 선거를 통한 집권경쟁기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각 정파의 정치철학에 따라 국가발전전략의 혼란이 가중된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칠레의 민주주의는 개발논쟁의 와중에서 칠레사회를 극도로 정치화하는 배경이 되었으며, 1950년대 이래 3개 노선으로의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마침내 각 정파가 차례로 집권하면서 극도의 개발전략 혼란이 야기되었다.

칠레정국은 카를로스 이바녜스(Carlos Ibáñez, 1952-58) 대통령에 의해 공산당이 1957년 합법화되면서 사회당, 공산당 간의 연합이 가능해져 새로운 3파전 시대를 맞게 되었다. 즉, 자유당과 보수당을 위시한 우익은 급진당(Partido Radical: PR)의 우경화로 힘을 얻고, 중도의 자리는 1950년대 들어 기민당(PDC)이 차지하며 최대정당으로 등장하고, 사회당-공산당의 연합이 굳건한 좌익을 형성하여 3파간의 지지가 팽팽한 가운데 근소한 표차로도 국가의 개발전략이 크게 뒤바뀔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실제로 1958년부터 1970년까지 우익, 중도, 좌익 정부가 차례로 집권하였다(Dominguez & Lowenthal 1996).

먼저, 우익은 19세기 교회의 정치역할과 중앙집권화를 둘러싸고 대립한 엘리트당인 보수당과 자유당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들은 20세기 들어 중도 및 좌파의 새로운 도전을 받으면서 기득권층이라는 공통점으로 결국 1967년 국민당(Partido Nacional: PN)을 창당하며 결

합하였다. PN의 지지기반은 대농장주, 기업주, 금융자본가들이었으며, 이념적으로는 자본주의체제, 자유방임주의 경제, 외국인투자의 지속을 지지하였으며, 구조개혁과 마르크시즘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1958년 대통령선거에서 우파연합의 호르헤 알레산드리(Jorge Alessandri)는 좌파연합의 살바도르 아엔데(Salvador Allende) 후보를 3만표 차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알레산드리 정부는 정통 자본주의 개발모형을 적용하여 민간기업과 외국인투자를 장려하며, 통화공급을 통제하여 인플레이를 억제하는 데 힘썼다. 다만 그의 집권시기중 쿠바혁명이 발생하였고,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빈곤을 추방해야하며 이를 위해 토지개혁 등 구조개혁을 주창함에 따라 알레산드리 정부는 1962년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였고, 농업부 산하에 농지개혁공사(Corporación para la Reforma Agraria: CORA)를 설치하였다. 당시 농지개혁법은 오지의 정부소유 토지를 개척하는 데 이용되었을 뿐이었지만, 장차 본격적인 농지개혁의 구실을 열어준 것만은 분명하였다.

둘째, 칠레의 중도파는 PR이 대변하였으나 PR은 1930년대 이래 좌우익간 이념적 방향 끝에 1970년대에는 약화되었고, 1930년대 보수당에서 갈라져 나온 기독교민주당(Partido Demócrata Cristiano: PDC)이 1960년대에 칠레 최대정당으로 부상하면서 중도계를 대변하게 되었다. PDC의 창시자들은 자본주의이론과 마르크시즘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리고 전통적 가톨릭의 숙명론에 대한 비판으로서, 현실세실현론(this-world approach)에 입각하여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를 표방하였다.

PDC의 에두아르도 프레이 몬탈바(Eduardo Frei Montalva) 당수와 좌파연합의 아엔데는 알레산드리 정부가 토지개혁에 미온적인 데 대해 정치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 프레이는 자본주의 체제유지, 토지개혁, 구리산업의 절대다수지분 매입을 기본입장으로 한 반면, 아엔데는 사회주의로의 전환을 주창하였다. 미국의 케네디정부가 이른바 ‘진보를 위한 동맹(Alliance for Progress)’의 기치하에 구조개혁을 주창하던 1960년대에 자본주의를 수용하는 중남미 구조개혁가들은

미국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1964년 9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미국은 칠레 좌익에 대한 테러를 자금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동년 3월 보수당의 아성인 쿠리코(Curicó)에서 실시된 보궐선거에 3개 정파가 각기 후보를 내 좌파가 승리한 사실은 우익에 큰 충격을 주었다. 우익은 결국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고 PDC의 프레이후보를 지지기로 결정하였다. 프레이는 “자유속의 혁명(Revolution in Liberty)”을 슬로건으로 우익과 미국의 지지를 업고 출마해 56%: 39%의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하였다.

그러나 프레이는 워낙 지지기반이 다양했기 때문에 그의 개혁정책은 어떠한 지지계층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특히 프레이대통령은 1962년 農地改革法을 개정하여 기본농지 80헥타르를 넘는 농지에 대해서는 몰수 후 소작인들이 3-5년간 공동경작하고 그후 협동농장과 토지분배 중 택일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시행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어 전국농지중 15%에 적용되었을 뿐이었고, 수혜소작인은 2만 명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지주계급은 농지몰수에 반발하여 CORA 관리들에게 폭력이 행사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 농지개혁을 창안했던 자크 촌출(Jaques Chonchol)은 “비자본주의적 발전론(A Non-Capitalist Route to Development)”이란 문건을 당과 정부가 1967~70년 정책기조로 삼을 것을 요구했고 프레이의 반대로 좌절되자 1969년 촌출 일단은 PDC를 탈당, 사회주의기독교당(MAPU)을 결성하였다. MAPU는 1970년 선거에서 사회당, 공산당 등과 제휴하여 좌파연합인 인민단결(Unidad Popular: UP)을 구성한다.

셋째, 칠레의 左翼은 사회당과 공산당이 주력이었다. 1912년 창당된 사회주의노동자당이 1921년 제3인터내셔널에 가입하면서, 공산당(Partido Comunista: PC)으로 개명하였고, 소련공산당을 추종하는 입장을 줄곧 견지하였다. 공산당의 지지기반은 도시산업 근로자와 광산노동자였으며, 칠레 노조의 상당수를 장악해왔다. 공산당은 1920년대 과격한 이념투쟁을 벌이다 점차 온건노선으로 선회하였다. 1930년대 공산당이 수립한 칠레 혁명전략은 개혁에 반대하는 대단위 지주와 기업인이 국민중 소수이므로 선거제도를 통해 대다수 국민을

결집시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반면, 1933년 창당된 사회당(Partido Socialista: PS)은 도농 프롤레타리아 및 중산계층을 망라하는 전국규모의 정당으로서 소련과 연계된 공산당과의 차별화를 꾀하였다. 사회당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며 선거를 통한 변화를 추구하는 기본입장에서는 공산당과 같았으나, 1959년 쿠바혁명 이후 사회당은 반란전략도 고려하는 보다 신축적이고 혁명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특히 공산당은 대농장주(latifundistas), 금융가, 산업가,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세력 등 우익이 칠레 저개발의 원흉이며 이들과 투쟁하기 위해 이들에 반대하는 중도세력을 포함한 대연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사회당은 계급에 기초한 협소한 연합만이 선거 및 사회혁명의 성공을 기할 수 있으며, PDC나 PR과 같은 중도파들은 진정한 혁명조치 앞에서 뒷걸음질 단순한 개혁주의자에 불과하며 이들도 우익과 마찬가지로 좌익의 적으로 간주하였다.

아옌데는 1970년 대통령선거에서 마침내 중도우파연합의 분열을 기회로 36%의 지지로 집권하였다. 칠레는 아옌데에 의해 급진적인 사회주의 개혁을 거치게 되었다. 아옌데정권은 팽창지향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펴 1973년에는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25%, 물가상승률이 605.1%에 이르는 등 경제불안을 야기하고 말았다. 또한 1940~70년 사이에 평균 3.7%를 기록했던 실질GDP 성장률도 1971년 9%를 제외하고는 1972년 -1.2%, 1973년 -5.6%로 연속 하락하고, 수입 통제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는 1972년 4억달러, 1973년 2억 7,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게다가 민중주의적인 정부정책에 고무된 급진주의자들은 공장과 농장을 점유하고 정부에 대해 사유재산의 국유화와 소득재분배를 요구함으로써 경제는 파탄에 빠지고 정치는 좌우익으로 양극화되어갔다. 아옌데 정부가 취했던 고임금, 고금리, 고관세, 수입물량 규제 등의 조치들은 市場歪曲을 심화시켰고, 재정적자, 내외국인투자의 급감, 생산정체, 고인플레이(1973년 605.1%), 실질임금 하락(1973년 38.6%) 등을 몰고 왔다. 또한 아옌데 정부는 임금수준을 포함한 모든 경제분야에 국가를 개입시켰고 주요 국내산업 및 외국기업, 금융기관을 국유화함으로써 기득권 세력과의 정치적

충돌을 야기하였다. 급기야 1973년 9월 11일 군은 기업인들과 중산 계층, 미국의 지지를 받으며 쿠데타를 일으켰다.

<표 1>에서 보듯이, 피노체트가 등장할 즈음 칠레의 정치와 국론은 우익과 중도, 좌익으로 고르게 3분되어 있었다.

<표 1> 정치혼란기 각 대통령후보의 득표율

	우 익	중 도(기민당)	좌 익
1958년	31.6%(알레산드리)	20.7%(프레이)	28.9%(아엔데)
1964년	중도와 연합	56.1%(프레이)	38.8%(아엔데)
1970년	34.9%(알레산드리)	27.8%(토미치)	36.3%(아엔데)

II.2. 시카고 보이즈와 신자유주의 국가전략의 수립

시카고 보이즈(Chicago Boys), 즉 밀턴 프리드먼의 영향을 받은 시카고학과 기술관료는 1950년대부터 시행된 칠레 가톨릭대학교와 시카고대학교간의 학술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시카고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일컫는 것으로, 이들은 칠레의 경제발전 전략을 자유시장경제로 전환, 안정화정책, 자유화정책, 대외개방정책을 시행하는 데 주역을 담당하였다. 시카고 보이즈는 1955년 테오도어 쉘츠(Theodore Shultz)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가 칠레 가톨릭대 경제학과를 방문, 체결한 유학프로그램을 거쳤으며, 약 8년간 30여명이 배출되었다. 프리드먼의 추종자가 되어 돌아온 시카고 보이즈들은 사회경제연구소(Centro de Estudios Socioeconómicos: CESEC)를 설립하고, 1970년 우익의 대통령 후보인 알레산드리의 경제공약 작성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시카고 보이즈는 아엔데 시절의 경제실패를 케인즈주의가 주장한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에 대비되는 ‘국가의 실패(state failure)’로 단정하였다. 시카고 보이즈는 1972년 보고서를 통해 국가의 경제간섭을 비판하고, 시장원리를 쫓는 신자유주의만이 칠레를 구출할 수 있다며, 신경제 수립을 위한 정치·사회 전반의 대수술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시카고 보이즈의 주장은 피노체트의 칠레사회 통치에 대한 기본철학, 즉 극도로 정치화된 칠레사회를 탈정치화(depolicitize)시켜야 한다는 것과 양립할 수 있었다. 초기 피노체트의 참모들은 강경파와 온건파(시카고 보이즈)로 갈리었으나, 1975년 3월 Milton Friedman이 칠레를 방문하여 자유시장모델을 강조한 데 이어 4월 24일 통화주의에 입각한 경제회복 쇼크정책이 발표되고, 1976년 12월 28일 Sergio de Castro가 재무장관에 기용됨으로써 시카고 보이즈의 위상은 확고해졌다.

피노체트 정권은 시카고 보이즈의 등용과 함께 대대적인 시장지향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당시 개혁은 가격자유화, 임금규제, 환율의 평가절하, 공공지출 삭감, 관세율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안정화계획을 바탕으로 민영화, 금융자유화를 추가한 경제회복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대외부문에서는 무역자유화를 진행시켜 1973년 평균 94%에 달했던 관세율을 1975년 단일관세율을 도입한 후 이를 1979년 10%로 인하하였다. 또한 금융·자본시장을 자유화하여 ▲제2금융업 설립 허용(1974년 5월), ▲외국은행 진입 허용(1974년), ▲국책은행(Banco de Estado)을 제외한 모든 은행들의 민영화(1975년), ▲금리자유화(1975년), ▲은행지불준비율 단계적 인하(100% → 4%, 1976년), ▲여신규제 폐지(1976년), ▲은행주식 보유한도제(개인 1.5%, 법인 3%) 폐지(1978년), ▲국내 대출 목적의 외국자본 은행차입 허용(1978년), ▲무역금융과 2년이상 장기자본거래에 한정된 외국자본도입 허용(1978년 2월), ▲단기외자 도입 허용(1982년)을 추진하였다.

Silva(1996)의 지적처럼, 시카고 보이즈가 전면에 나선 이 시기 피노체트의 경제정책은 이데올로기적으로 급진적이고 엄격한 신자유주의였다. 시카고 보이즈는 사회세력들로부터 유리된 채 시장경제개혁을 일사분란하게 추진해 칠레 경제는 급성장을 기록하는 듯 보였지만, 여기에는 금융투기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고 마침내 칠레경제는 다시 대공황이래 최악의 경제위기로 빠져들었다.

II.3. 1982년 외채위기와 신자유주의 개혁의 지속

칠레경제는 수출확대로 1977~81년까지 평균 8% 성장의 호황기를 맞았으나 인플레이제를 위해 도입한 고정환율제와 고금리가 수출농산물 업계와 산업부문의 몰락을 부르고, 금융시장 자유화조치는 대기업과 연계된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해외차입과 부동산·금융투기를 불러 마침내 1981년 중반 금융위기로 치달았다. 칠레의 시카고 보이즈들은 시장기능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1981년 5월 칠레 제일의 제당회사(CRAV) 파산을 시작으로 은행과 기업들의 파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에도 정부개입의 비효율성을 강조한 나머지 방관함으로써 초기 위기관리에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칠레경제는 1982년 -14.1%의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었고 이어 피노체트 정권은 IMF 체제를 맞게 되었다. 칠레 신자유주의 모델의 첫 실패는 기업가 윤리와 금융제도 등 성숙하지 못한 경제사회 환경에 무리하게 적용된 모델의 부작용으로 평가된다. 1978년 달러당 39페소에 고정시킨 환율은 물가상승과 함께 실질적인 고평가가 초래되었다. 또한 민영화된 은행들이 칠레 재벌들의 수중에 들어가 기업인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기업과 금융기관이 동시에 부실화되었고, 기준율 인하, 금리자유화, 해외차입 규제완화 등이 방만한 자금관리를 부름으로써 1982년 칠레의 대외부채는 GDP의 130%(173억 달러)를 기록, 당시 국제적 고금리와 경기침체의 직접 영향하에 들게 된 것이었다.

칠레 군부는 1981년 11월 부실 2차금융기관 6개를 인수한 데 이어 IMF와 구제금융협정을 맺은 1983년 1월 이후에는 2대은행을 포함한 5개 은행인수, 3개 은행 파산처분, 2개 은행 직접감독 등 전 금융산업의 80%를 정부의 통제하에 두었다. 이는 부실화된 은행의 정리·관리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불황으로 세수입이 감소한데다 민간부채마저 떠안은 정부는 국제자금지원과 아울러 공무원 임금 삭감, 사회지출 삭감, 공기업매각 등으로 재정적자를 메워나갔다. 다른 한편으로는 반덤핑 법안을 제정하고 관세를 인상했으며, 생산부문 보조를 부활시키며 수출증대를 기했다.

칠레의 금융위기 경험에서 주목할 점은 시카고 보이즈들의 시장기능 신념이 금융위기 초기에 퇴색하였다는 사실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다. 칠레 정부의 적극적인 위기관리는, 한때 국제사회로부터 ‘군부의 新사회주의화’ 우려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대해 칠레 군부는 거시경제적 안정이 1차 목표였음을 천명하고, 1985년부터는 신자유주의정책의 일관성을 철저히 회복시켰으며 2차 구조조정의 초점을 작은정부 실현, 공기업 사유화확대, 금융감독 강화, 중앙은행 독립, 수출인센티브제 도입에 두었다.

2차 구조조정에서 정부는 금융부문 개혁에 있어 1986년 은행법을 개정, 은행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은행의 기업 및 타은행 주식소유 금지는 물론 국외대출 및 국내외 자회사 설립을 중지시켰다. 1989년 12월에는 중앙은행법을 제정, 중앙은행 이사회를 정당인이 아닌 인사들로 개편함으로써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제고시켰다. 피노체트는 아옌데 행정부에 의하여 국유화된 기업을 포함하여 500여개에 달했던 공기업 가운데 절반가량을 원소유주에게 반환 또는 경매하는 방식의 민영화를 실시하여 1973년 50%를 상회하던 공공부문의 GDP 비중을 1981년 24%까지 낮추었는데 다시 그 비중을 1986년 12%, 1989년 7.5%로 낮추었다. 따라서 멕시코나 아르헨티나 경우와는 달리 1990년대 민선정부하에서 추진된 전력, 통신, 보험, 의약, 제당, 석유, 철광, 화학, 항공 부문의 민영화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이었다.

피노체트시대 자본조달 방식의 특징은 시장경제 원칙을 따르면서도 외국자본의 유입 또는 지배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 점이었다. 이는 피노체트 모델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국내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적 고려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우선 자본조달방식을 외채에서 국내자본으로 전환한 점으로서, 정부는 국유화했던 은행의 재사유화를 위해 중앙은행이 지불보증하는 주식을 소액투자자들에게 매각했다. 또한 전화, 철강, 석탄광업부문의 공기업도 해직기금 주식전환을 통해 근로자나 소액주주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사유화시켜 영국의 민영화 사례와 유사한 이른바 ‘대중자본주의(popular capitalism)’를 실현했다. 또한 다른 남미국가들은 저축률

이 낮은 상태에서 해외차입에 의존하고 핫머니(국제투기자금)에 쉽게 노출돼 위기를 다시 맞기도 했으나 칠레는 1981년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연금저축구좌(PSA)제도를 도입한 이래 저축률상승(27%)에 성공했고, 해외유입자금 30%의 1년간 중앙은행 유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엔카헤제도’¹⁾를 통해 공고한 경제를 운용할 수 있었다(Meller 1992; Riveros 1994).

결국 피노체트의 경제정책 운용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대 후반 중남미지역에서 보기 드물게 안정성장 기조를 정착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노체트의 경제정책운용에서 제2기로 구분할 수 있는 이 시기가 앞선 제1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Silva(1996)는 제2기를 ‘실용적 신자유주의’ 시기로 구분한다. 즉, 신중한 재정·통화정책에 기초한 성장지향적 산업정책에 초점이 두어졌다는 것이다. 이 시기는 시카고 보이즈가 독단적으로 끌어간 ‘급진적 신자유주의’ 시기와는 달리 지배적 자본가 연합이 경제정책과정에 긴밀히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정권과 유착한 시기였다. 이들과 피노체트정권과의 유착은 1980년대 중반 야권으로 하여금 피노체트 조기퇴진운동을 포기하게끔 만들었고, 나중에는 민선정부의 경제정책 자율성의 폭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지배적 자본가연합이란 공상연합회(Confederacion de la Produccion y Comercio: CPC)가 중심이 되어 농림수산업 및 광업의 수출업자들을 규합한 세력으로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국내자본가가 전면에 나서야한다는 대의명분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시장원칙과 개방을 주장하면서 피노체트정권에서 급진정통주의를 고집하던 시카고 보이즈를 점차적으로 몰아내었으며, 야권이 노사조정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던 이른바 사회적 화합(Concertación social)을 좌초시킴으로써 향후 민선정부로 하여금 실용적 신자유주의를 수용하고, 이를 불가침의 영역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Silva

1) Encaje제도란 핫머니 유입방지를 위해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금(해외차입금, 간접투자, 직접투자에 사용되는 해외차입금 포함, 직접투자는 제외)의 30%를 1년간 중앙은행 무이자계정에 예치도록 규정한 제도로써 1991년부터 시행되어왔다. 동 제도는 1998년 9월 실행 중지되었다.

1996, 223-228).

<표 2> 피노체트 치하의 칠레 주요 경제지표

(단위: 10억 달러)

연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총외채	무역수지	경상수지 ¹⁾
1974	1.0	369.2	-	-	-2.6
1975	-12.9	343.3	4.9	-	-6.8
1976	3.5	197.9	4.7	4.1	1.5
1977	9.9	84.2	5.2	-2.3	-4.1
1978	8.2	37.2	6.7	-7.8	-7.1
1979	8.3	38.9	8.5	-8.7	-5.7
1980	7.8	31.2	11.8	-14.4	-7.1
1981	5.5	9.5	15.5	-34.1	-14.5
1982	-14.1	20.7	17.1	-0.1	-9.5
1983	-0.7	23.1	17.4	1.0	-5.6
1984	6.3	23.0	18.9	0.3	-10.7
1985	2.4	26.4	19.3	0.91	-8.3
1986	5.7	17.4	19.4	1.1	-6.5
1987	5.7	21.4	19.1	1.2	-4.6
1988	7.4	12.7	17.6	2.2	3.0
1989	10.0	21.4	16.3	1.6	-2.1

주 : 1) GDP대비 %

출처 : Banco Central de Chile, Boletín Mensual: Indicadores Económicas y Sociales 1960 ~ 85 ;
No. 846, Agosto 1998.

III. 민선정부의 신자유주의 수용

III.1. 과도기의 '잠재적 위기' 관리전략

1990년 칠레의 정권은 Concertación에게 넘겨졌다. Concertación은 PDC와 사회당(PS), 그리고 인민민주당(PPD)를 핵심으로 하는 중도좌파연

합이었다. Concertación은 예상과는 달리 과도기 국가전략의 실행에 있어 신중한 접근을 견지하였다. 특히 민주화와 함께 중남미의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서 발견되는 과거 청산은, 칠레의 경우 매우 더디게 진행되어 사실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칠레의 민선정부들이 정치사회적 안정(security)에 최우선순위를 두었음을 의미한다. 민선정부들은 17년간에 걸친 군사정부가 남긴 강권통치의 유산들인 인권문제, 살해 및 실종자 문제, 국론분열 등을 해결하기 위한 민주개혁의 부담을 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변화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점진적인 변화의 길을 택하였다. 이는 피노체트가 권좌에서 물러난 후에도 면책특권과 국군총사령관의 지위를 향유하고 있었던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Concertación은 능동적으로 피노체트의 경제정책 노선을 답습하였다.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계기는 지금까지 3차례 있었다고 보여진다. 집권 첫해인 1990년 피노체트 정권이 말기에 시행한 팽창정책에 대한 조정과 업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긴축이 필요했고, 1994-1995년 멕시코의 폐소화 위기에 대응하여 긴축을 시행해야 했으며, 1998년 아시아위기의 여파가 남미신흥시장을 타격을 주었을 때 또다시 긴축에 들어가야 했다(Teichman 2001, 84). 이러한 전환시점마다 칠레의 Concertación은 긴축이 가져올 정치적 손실을 감수하고 거시경제 안정에 보다 무게를 실었다. 그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칠레경제는 안정성장을 지속하였다. 다만, 사회당 정권의 등장에 즈음한 시기인 1999년 남미 이웃국가들의 경제위기 영향 속에서 부진을 면치 못한 점은 그중 예외 아닌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즉, 민선정부들은 기존 경제구조의 근간을 이루는 국제경쟁력 확보에 입각한 개방체제, 시장원칙, 민간부문 주도, 거시경제안정, 저축투자 장려에 있어 기존 정권의 노선과 일치된 입장을 보였다. 이같이 민선정부들이 피노체트 시장모델을 재확인한 이유는, ① 민주화가 남미 주요국 가운데 가장 늦게 진행됨으로써 페루의 알란 가르시아(Alan Garcia)나 아르헨티나의 라울 알폰신(Raul Alfonsin)의 경우에서 나타난 경제모델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시행착오를 타산지석으로 삼

을 수 있었으며, ② 피노체트 군사정권이 성장가도의 경제를 유산으로 남김으로써 기존 모델에 대한 국내외적 신뢰가 강하며, 이미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 차별화되어 있던 점을 민선정부가 포기할 이유가 없었고, ③ 시기적으로 소련권의 붕괴와 맞물려 국제적으로 대체 발전모델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④ 국내외 기업인 및 국제금융계가 과거 사회당시절의 혼란으로 회귀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였고, ⑤ 좌파도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음을 과시하려는 부담을 민선정부가 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Dominguez & Lowenthal 1996; Flano 1992; Meller 1992; Rehren 1995). 에일윈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역임한 알레한드로 폭슬리(Alejandro Foxley)가 회고한 바와 같이 민선정부들은 국민의 기대를 부풀리기 보다 민선정부하에서도 사회·경제정책의 성과를 올려야하는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었다(Foxley 1993, 7-9).

<표 3> 기민당 정부하의 칠레 주요 경제지표, 1990~99년

(단위: 10억 달러)

연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총외채	무역수지	재정수지
1990	3.7	26.6	17.4	1.3	1.4
1991	8.0	22.0	16.4	1.5	2.2
1992	12.3	15.6	18.2	0.7	2.8
1993	7.0	12.2	19.2	-1.0	2.0
1994	5.7	8.9	21.5	0.7	2.0
1995	10.6	8.2	21.7	1.4	-0.3
1996	7.4	6.6	23.0	-1.1	4.4
1997	7.1	6.0	26.7	-1.3	3.3
1998	3.2	4.7	28.5	-2.1	0.3
1999	-1.0	2.3	31.2	2.5	-1.0

자료 : Banco Central de Chile; IADB.

이 점에서 칠레의 민선정부들은 경제적 번영(prosperity)을 가져올 수 있는 모델로서 기존의 신자유주의 모델을 거부하지 않았던 것이다. Collier & Sater(1996, 382-383)는 에일윈 정부의 국정과제가 ① 유

연한 민-군 관계 확보, ② 인권유린 문제 관리, ③ 경제성장 유지 및 사회불균등 해소였다고 지적하고, 1993년에는 인권유린 소송을 가속화시키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즉, 첫 민선정부인 에일윈 정부에게는 전환기 정치운영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으므로 경제정책의 전환과 같은 혼란은 선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노체트의 군사독재 지속 지지여부를 묻는 1988년 10월 국민표결에서 피노체트 정부 측이 신임을 받지 못하여 대통령 선거로 이어지는 순간부터 과도기의 정치경제 게임과 pre-피노체트 세력의 시험이 시작된 것이었다. 이는 장기간 지속된 안정추구형 칠레의 발전전략이 잠재적 위기에 봉착하는 계기를 마련되었기 때문이었다. 잠재적 위기란, 1989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이 중도좌파 연합을 구성하여 “진보적 민주화 및 국민화합”을 내세움으로써 기업인들의 기억속에 악몽으로 남아있던 과거 1960년대와 1970년대초 개혁정부와 자본가계층간의 긴장을 되살리고, 최악의 경우 반동적 대응이 우려된 점이었다. Concertación측이 1989년 정강(Programa de Gobierno)을 통해 발표한 ① 사회지출 확대를 위한 조세인상, ② 노동자들의 권리보장, ③ 긴축정책 실시 등이 관건이었다. 특히 Concertación은 피노체트 정권하에서의 경제적 구조조정이 높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당시 여권의 에르난 뷔치(Hernán Büchi) 후보도 경제발전의 혜택을 향유하지 못한 계층들을 위한 “현대화 강화” 프로그램을 발표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고용창출과 사회적 유동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교육에 중점이 두어진 것으로 자본가계층의 기득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었다. 자본가 계층은 피노체트 독재하에서 조세인하와 노동운동 탄압의 반사이익을 누림으로써 국가나 노동계에 대해 상대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따라서 오스카르 무뇨스(Oscar Muñoz) 등의 지적처럼, 자본가계층은 사회정책과 노동정책, 긴축정책을 내세운 민선정부를 불신하였고, 민선정부로서는 자본가계층의 불신을 희석시키는 것이 최대의 과제였다(Muñoz & Celedon 1993).

1980년대초의 경제위기가 피노체트 군부정권에 대한 정치적 위협

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할 즈음 사회당계열에는 아옌데식의 극단주의를 쫓는 계파(allendista)와 PDC와의 연계도 가능하다는 신사회주의파가 등장했다. 피노체트하의 경제는 1980년대 중반을 넘기면서 다시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으며, 이는 두 가지 효과를 가져왔다. 첫째, PDC는 1984년 6월 승산 없는 개헌투쟁을 중지하고 1980년 헌법대로 피노체트의 현행임기를 “기정사실”로 인정하였다. 둘째, 좌파성향의 반피노체트계의 입지는 더욱 좁아져 마침내 1988년 2월 공산당을 제외한 15개 정당 및 정치운동단체들이 피노체트 임기연장 찬반을 묻는 국민표결에서 반대를 주장하는 Concertación²⁾을 조직하고 시장경제와 사회정의 실현을 광범위하게 수용하는 중도성향을 띠게 되었다(Collier & Sater 1996, 377-380) 특히 Silva(1996, 231)는 이와 관련하여 Concertación이 실용적 신자유주의 자본가연합에게 수출지향적인 시장경제와 거시경제적 안정, 인플레이 억제를 위한 재정지출 및 임금 상승 억제를 약속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Concertación의 정책입안자들은 피노체트 시대와 같은 기술관료들이었으며, 1980년대 후반 칠레경제의 안정성장과 지적 분위기 형성에 압도되어 신자유주의를 그대로 수용하였고, 기술관료의 등용 역시 과거와 별반 다름없이 싱크 탱크인 라틴아메리카경제연구원(Corporación de Investigaciones Económicas para Latinoamérica: CIEPLAN)³⁾에 의존하게 되었다. 특히 경제정책의 핵심은 대통령, 비서실장,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경제장관, 공공사업장관, 노동장관이 참여하는 경제정책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무장관의 발언력이 가장 강했다. 이는 프레이 행정부하에서 더 두드러졌다. 재무장관은 사회정책조정위원회에도 참여하여 보건장관, 교육장관, 사회기획부(MIDEPLAN) 장관 위에 군림하였다(Silva 1991, 400-406; Teichman 2001,

2) 처음 명칭은 La Concertación de Partidos por el No였으나, 나중에 La Concertación de Partidos por la Democracia라고 개칭함.

3) CIEPLAN은 중도좌파계의 정책연구원으로, Foxley 前재무장관이 깊이 관여하였고 칠레 민주화 초기 정부의 핵심 경제 싱크 탱크 역할을 하였다. 동 연구원의 인사들은 재무부와 인적교류, 미국의 각종 재단 및 대학과의 공동연구가 활발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말 들어 대학연구소 및 사회 각 분야 연구기관이 정상을 되찾으면서 약화되었다.

87-91). 특히 에두아르도 프레이(Eduardo Frei) 대통령은 1998년 재무 장관에게 향후 2년간의 사회정책 기획을 맡김으로써 로베르토 피사로(Roberto Pizarro) 사회기획장관의 사직을 야기한 일화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Concertación의 위기관리 전략은, 사회정책과 노동정책을, 모두 안정과 성장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경제정책의 한계 속에서 추진한다는 원칙을 확고히하는 것이었다. 사회정책은 과거와 같은 민중주의(populism)로의 회귀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경제적 균형정책과 양립할 수 있는 신중한 정책을 수립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였고, 노동정책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유지를 전제로 한 채, 과거 무시된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또한 긴축정책은 물가안정을 이루기 위한 단기적인 조치에 그쳤다. 에일윈 행정부는 ▲금리인상, 통화공급 억제 등의 인플레이 억제정책, ▲법인세 과세 기반의 확대, 부가가치세 인상 등의 세제개혁, ▲국영기업의 민영화, ▲관세인하(1991년 11%)를 통한 무역자유화 등을 실시했고, 프레이 정부도 ▲競爭力 強化, ▲관세율 인하(1998년 8%) 등으로 기존의 개방정책을 유지하였다. 에일윈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이 성공을 거두면서 1990년대 말부터 칠레 경제는 활력을 되찾기 시작하였으며, 자본가 계층도 Concertación에 대한 기존의 불신·환멸 태도로부터 신뢰입장으로 선회하였다. 더욱이 Concertación은 후술하는 지역경제통합 정책과 인프라투자 확대, 교육개선 사업등을 통해 자본가계층과의 협력기회를 넓힐 수 있었다.

아래에서는 민선정부가 피노체트 모델과의 차별화를 추구한 두 부문을 상술한다. 민선정부는 피노체트 독재로 발생한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탈피하여 적극적인 지역경제통합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사회부문 개혁에 치중하여 실질임금의 단계적 인상, 저소득층 지원, 사회공공서비스 확충 등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정책을 실시하였다.

III.2. 대외부문 차별화 전략: 글로벌경제 참여를 위한 국제화전략

III.2.1. 국제화 전략과 칠레의 국제적 부상

칠레의 민선정부들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으로부터 정치적 민주화가 가져온 화해분위기를 활용하여, 미주국가 및 아시아태평양지역, 유럽과의 자유무역 실현을 통해 시장진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즉, 칠레는 피노체트 시절 중남미국가들이 지역경제통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제블록에 참여하지 않은 거의 유일한 국가로 남아 있었다. 칠레는 1969년 안데스공동시장(ANCOM)의 창립회원국이었으나 본래 외국인투자 제한 등 민족주의적 경제정책을 추구한 ANCOM의 방향이 피노체트 정권의 개방정책과 양립할 수 없어 1976년 이로부터 탈퇴하였다. 당시 이는 안데스지역국가들의 외국자본 견제에 당황하던 미국자본가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을 수 있었다. 비록 칠레는 지역통합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시카고 보이즈들의 적극적인 수출산업 육성책으로 칠레의 교역상대는 유럽, 아시아, 美洲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칠레는 1990년대 각지역에서 블록화가 진행됨에 따라 수출시장 확보의 필요성을 실감하였고, 특히 1991~93년 사이에 유럽시장의 비중이 34.2%에서 28%로 낮아지고 美洲 및 아시아 시장의 비중이 각각 38%와 30%로 높아지는 등 교역구조에 변화가 일자 유럽시장 진출기회의 회복과 북미, 아시아, 중남미역내로의 수출확대를 위해 지역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Saavedra Rivano 1996; Saez 1995; Toloza & Lahera 1998).

1990년 3월 출범한 칠레의 문민 1기 에일윈 행정부와 1994년 3월 들어선 문민 2기 프레이 행정부는 3대 국가발전 목표를, 거시경제 균형 유지, 빈민층의 기본생활 보장, 개방경제 가속화로 정하고 이중 마지막 요소를 ‘칠레경제의 국제화(internacionalización de la economía chilena)’라는 이름으로 추진하였다. 여기서 국제화는 ‘고립’으로부터 ‘외국과의 적극적인 통합모색’이란 의미로 사용된다. 칠레 국제화전략의 기본틀은 에일윈 행정부하에서 만들어졌다. 폭슬리 당시 재무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 기술관료들과 CIEPLAN은 거시경제 안정을 바탕으로 “남미구석에 위치한 작고, 개방된 나라의 발전방향 모색”이란 차원에서 국제화전략수립에 착수했다(Butelmann & Meller 1992; Chile 1993).

프레이 행정부는 시정공약과 대통령의 의회교서(1994년 5월), 에두아르도 아나나트(Eduardo Aninat) 재무장관의 정책연설(1994년 8월)을 통해 2000년을 향한 칠레의 국제화전략을 밝혔다(Chile 1994). 프레이 행정부의 국제화전략 기본 취지는 2000년까지 칠레를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기 위해 칠레경제를 점증적으로 세계시장에 통합시켜 나간다는 것이었다. 칠레의 국제화전략은 노-사-정이 단합하여 “주식회사 칠레(Chile Inc.)”의 실현을 통한 수출형 경제의 장기 활로개척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었다. 프레이 행정부가 설정한 국제화전략의 대원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자유주의원칙에 입각한 상품-서비스시장 및 외국인투자의 개방.
- (2) 무역 및 투자확대를 위한 지역협정 활용 및 개방적 지역주의 추구.
- (3) 시장개방, 양자간협정 및 다자간무역기구 참여에 있어 일관성 유지.
- (4) 경제발전의 주체 및 국제화의 최종적 향유자로서의 민간부문 위상정립.

이상과 같은 대원칙하에서 수립된 국제화전략의 구체적인 실천방향은 다음과 같다.

- (1) 수출시장 접근의 안정성 확보.
- (2) 수출상품과 서비스의 다양화 및 양적 질적 향상.
- (3) 수출시장 다변화.
- (4) 국제경쟁력 및 노동생산성 증진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확대.
- (5) 경제블록형성에 대비, 제3국 시장진출 여건 유지.
- (6) 생산구조 및 대외부문 관련제도의 개선.

수출확대와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를 위해 칠레의 1990년대 국제화 전략이 치중하는 분야는 자유무역협상이었다. 그 결과, 칠레는 멕시코,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캐나다, 남미공동시장(MERCOSUR)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고, 1994년에는 APEC에 가입하였으며, 최근에는 미국, EU 및 한국과도 FTA 체결하였다.

이같은 칠레의 국제화 전략에서 주목되는 것은 스스로 ‘亞太-南美 관문정책(Gateway Policy)’을 통한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이다. 칠레는 남미국가중 가장 먼저 APEC에 가입하고, MERCOSUR의 준회원국이 되었으며, 아시아지역과의 교역비중이 높은 점을 강조하여 이른바 스스로 아시아와 남미를 잇는 관문으로서 비즈니스 허브를 추구하고 있다(Irigoien Barrenne 1997; Lagos Erazo 1997; Tarud 1997). 이를 위해 칠레는 1994년 칠레태평양재단(Fundación Chilena del Pacífico)을 설립하였고, 1997년 제12차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총회를 유치하여 이를 관문정책 과시의 장으로 활용하였으며, 1998년에는 싱가포르의 고축동 총리와 함께 지역간 정상회의인 ‘동아시아중남미포럼(East Asia-Latin America Forum(EALAF))’을 제창하였다.

<표 4> 칠레 민선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협 정	체 결	발 효	회 원 국
칠레-MERCOSUR	1996. 6	1996. 10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칠레-캐나다	1996. 12	1997. 7	캐나다
칠레-멕시코	1998. 10	1999. 8	멕시코
칠레-CACM	1999. 10	2002. 2	중미 5개국 칠레-코스타리카(2002.2 발효) 칠레-엘살바도르(2002.6 발효)
칠레-EU	2002. 11	2003. 2	EU 회원국
칠레-한국	2003. 2	2004. 4	한국
칠레-미국	2003. 6	2004. 1	미국
칠레-EFTA	2003. 6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FTAA	협상중		미주 33개국(쿠바 제외), 협상중

III.2.2. 지역경제통합과 자본가계층 회유전략

칠레 민선정부는 업계, 노동자연합중앙회(Central Unitaria de Trabajadores: CUT)로 대표되는 노동계와 1990년 칠레의 세계시장 편입 및 개방적 지역주의⁴⁾에 대한 기본원칙합의를 이루었다. 이어 1992년에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민간대외경제관계위원회(Comité Privado para las Relaciones Económicas Internacionales)의 결성을 재확인하였으며, 1993년초 이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이같은 민선정부 출범 초기, 즉 정치적 과도기의 3자 합의는 얼마가지 않아 정작 NAFTA 가입이나 MERCOSUR 가입문제가 표면화되면서 노동계와 업계-정부간의 이해충돌, 그리고 농업계와 여타부문간의 이해충돌로 이어지게 되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정부는 자본가계층(업계)과 항상 일치된 입장을 유지하였으며, 이 점이 칠레 민선정부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1980년대 후반 지배자본가연합이 주도한 실용적 신자유주의의 전통에 따라 재계와 정부간의 유착이 Concertacion 정부하에서 결코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어왔음을 시사한다 (Teichman 2001, 92).

예컨대, 1994년 칠레정부와 업계는 NAFTA에 노동 및 사회조항이 포함되는 데 반대함으로써 노-사-정간의 합의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즉, 업계의 시각에서 보면 미국, 멕시코, 캐나다간에 합의된 환경 및 노동에 관한 NAFTA 부속협정이 노동시장의 법규정을 재정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속협정을 받아들이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부속협정의 내용을 변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NAFTA에 노동 및 사회조항을 새로이 포함시키거나, 아예 NAFTA 가입보다 미국과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다면 이는 칠레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업계는 주장한 것이다. 반면, 노동계 특히 CUT는 경제통합이 가져올 산업폐쇄 및 산업재배치가 고용안정을 해치고 실업을

4) 중남미의 ‘개방적 지역주의(regionalismo abierto)’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통용되는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와 약간의 의미차이가 발견된다. 아태지역의 경우, 개방적 지역주의가 본래 역내외 무차별 원칙을 추구한데 반해, 중남미에서는 과거의 보호주의에 입각한 지역주의가 아닌 개방정책에 입각한 지역주의라는 의미로서 자유무역이나 관세동맹 등 지역경제통합정책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증대시킬 것이라며 NAFTA 협상과정에 참여할 것을 주장했었다. 또한 CUT는 앞서 1993년 민간대외경제관계위원회에 지역통합과 관련한 노동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의하였다. CUT는 이 제안을 통해 칠레상품의 국제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양자간 및 다자간 무역전략의 추진 필요성을 인정하고 칠레경제의 국제화 심화만이 경제성장과 균등분배 및 사회적정의의 개선을 장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민주주의제도를 공고히 하려면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지역경제 통합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며, NAFTA 가입을 찬성하되 신자유주의 모델이 초래하는 사회적 배제 경향을 막기위해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포함시킬 것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일 그러한 보장이 없다면, NAFTA는 기업가 및 금융가의 이해를 도모할 뿐이며, 노동자의 권익을 부속협정으로 밀어내는 셈이기 때문에 차라리 NAFTA 가입보다는 미국과의 양자간 협정을 선호한다는 것이었다 (Fernandez Jilberto 1996; Schiff & Sapelli 1996).

칠레정부와 업계는 이같은 노동계의 입장에 반대하였으며, 결국 CUT는 1994년 12월 마이애미에서 개최된 미주정상회의에 참가하는 칠레사절단에 대표를 파견치 않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CUT는 1994년 12월 6일 모든 무역협정 논의에서 노동계가 소외되었음을 주장하며 NAFTA 및 MERCOSUR 관련문제에 관한 모든 노-사-정 3자회의에 불참키로 결정하였다. 이는 칠레정부가 업계에 편향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노동계를 점차 무시해온 데 대한 정치적 불만의 표시였다. 특히 노동계는 칠레정부가 NAFTA 부속협정도 지키지 않을 것으로 의심했는데 이는 칠레정부가 민주화 이후에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7호(노조자유 및 노조활동권 보호), 제98호(단체교섭), 제151호(노동자 안전 및 보건, 노동환경), 제154호(농촌조직)를 비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CUT는 미국 노동총연맹 산업별회의(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AFL-CIO), 멕시코노동자총연맹(Confederación de Trabajadores de México: CTM), 캐나다노동회의(Canadian Labor Congress: CLC) 등 NAFTA 회원국 노동단체들과 공동보조를 취해 1995년 5월 자국정부

로 하여금 ILO 협약에 규정된 노동조건들을 존중할 것을 요구키로 합의하였다. 이같은 요구는 지역경제통합을 추구하는 칠레정부에게 노동권을 묵살할 우려가 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활동을 규율하기 위한 행동준칙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III.3. 대내부문 차별화 전략: 사회적 통합을 통한 안정추구

칠레의 민선정부들은 피노체트 독재하에서 억눌렸던 인권의 신장을 위해 노동자계층의 권리회복에 주력하여 왔다. 특히 에일윈 정부는 민주화이후 1990년 노동법개정을 통해 노조의 권한 및 단체교섭을 확대하는 등 기본적인 노동자 권익보호를 도모하였고, 1992년 노-사-정이 참여하는 민간대외경제관계위원회(Comité Privado para las Relaciones Económicas Internacionales)를 결성시켜 시장개방으로 나타나는 노동문제에 대한 노사정 협의를 지속함으로써 원만한 노사관계를 지향하였다. 그러나 CUT는 이미 1960년대의 노동운동에 못 미치는 나약한 노동운동을 대변하고 있는 수준이었다. Concertación은 1995년 임시직에게도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파업기간중 대체인력 고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우익의 영향력이 건재한 상원에서 좌절되었다(Teichman 2001, 86).

다른 한편, 민선정부는 신자유주의 모델로부터 파생된 빈곤층의 확대, 빈부격차의 심화를 치유하기 위한 사회지출 강화에도 노력하였는바, 문민정부가 출범한 1990년에는 사회정책과 공공투자 증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3년까지 한시적으로 법인세율을 종전 10%에서 15%로 인상하고, 개인소득에 대한 누진세를 적용하였으며, 부가가치세율을 종전 16%에서 18%로 인상하였다. 또한 민선정부는 실질임금의 단계적 인상, 저소득층 지원, 사회공공서비스 확충 등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정책을 실시하여왔다. 또한 군사정부는 정부주도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사회공공서비스를 지방정부 또는 민간 부문에 이관해 왔었다. 그러나 민선정부 들어서는 빈곤과 소외 등의 사회문제 해결이 시장기능에 의해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지방

정부의 역할은 확대시키면서 공공사회서비스 민영화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역할을 강화하였다. 민선정부들의 사회정책은 빈곤층을 총 인구의 50%(1987년)에서 24%(1997년)로 크게 낮추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는 아직 1970년 수준(23%) 보다 높은 편이며, 여전히 빈부 격차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Oppenheim 1999, 221).

상술한 바와 같이 1990~2000년까지 2기에 걸친 칠레 민선정부들의 사회정책은 경제안정 유지의 한계에 묶여있었고, 노동정책 역시 자본가계층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해야하는 필요에서 매우 제한적인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2000년 3월 집권한 리카르도 라고스(Ricardo Lagos) 대통령이 이전의 두 PDC 출신 Concertación 정권 대통령들과는 사회당 출신이어서 사회적 통합을 통한 차별화 전략에 더욱 역점을 두어, 사회정책분야 재정지출은 1990~91년의 경우 1인당 441달러 수준에 그쳐 GDP대비 11.7%, 총재정지출의 60.8%를 차지하였으나 2000~01년에는 1인당 936달러, GDP 대비 16.0%, 총재정지출의 69.7%로 각각 증대되었다.

이로써 민선정부들의 군부, 자본가, 노동자·빈곤층 등 사회 세세력에 대한 관리 전략은 <표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당 집권이후의 칠레 경제도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였다고 평가된다.

<표 5> 칠레 민선정부의 사회세력 관리 전략

	군 부	자 본 가	노동자빈곤층
기본방향	진보적 민주화	사회지출확대, 조세인상	노동자 기본권보장
과도기적 전략	신중한 타협 피노체트특권 보장 → 안정추구	시장모델 확인 지역통합·인프라투자 → 번영 추구	사회지출 확대 노동기본권 보장 → 화합 추구

<표 6> 사회당 집권 전후한 칠레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항 목	단 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국내총생산 ¹⁾	십억 달러	79.4	73.0	75.2	68.4	67.4	72.1	86.5
1인당 GDP ¹⁾	달러	5,355	4,861	4,944	4,442	4,316	4,560	5,405
실질GDP성장률	%	3.2	-1.0	4.4	3.1	2.1	3.2	5.0 ³⁾
금리(평균) ²⁾	%	18.42	11.93	13.91	11.28	7.49	6.01	4.80 ⁴⁾
공업생산증가율(연율)	%	-1.1	-1.3	4.2	0.8	2.5	2.7	5.6 ⁵⁾
물가상승률(연율)	%	4.7	2.3	4.5	2.6	2.8	1.1	1.5 ⁴⁾
실업률(INE, 기말) (대도시 중심)	%	7.2	8.9	8.3	7.9	7.8	7.4	9.9 ⁴⁾
		11.4	12.4	13.4	13.1	11.9	11.7	11.6 ³⁾
수 출(FOB)	십억 달러	16.3	17.2	19.2	18.5	18.3	21.0	20.8 ⁶⁾
수 입(FOB)	"	18.4	14.7	17.1	16.4	15.8	18.0	14.3 ⁶⁾
경상수지	"	-4.0	-0.3	-1.1	-1.1	-0.9	-0.6	1.9 ³⁾
재정수지/GDP대비	%	0.4	-1.4	0.1	-0.3	-0.8	-0.8	1.8 ¹⁾
총외채	십억 달러	28.5	31.2	32.0	33.0	36.1	37.2	35.7 ¹⁾
외환보유고(기말)	십억 달러	16.0	14.7	14.7	14.4	15.4	15.9	15.8 ⁴⁾
환율(observado, 기말)	페소/달러	473.77	527.70	572.68	656.20	712.38	599.42	609.96 ⁴⁾

주 : 1) Global Insight 전망치, 2) 전체 금융기관 단기물(30~89일물) 명목여신금리 기준, 3) 상반기, 4) 9월 기준, 5) 7월 기준, 6) 8월 기준.

자료 : Banco de Chile ; Global Insight. Oct. 2004. *Chile-Summary of Detailed Forecast, Annual Numbers.*

IV. 결론

칠레는 오늘날 개발도상권 국가중 가장 성공적인 개혁모델로 지칭될 만큼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내었다. 다만 최근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구리가격의 하락으로 대외부문의 불안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칠레경제의 건실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는 굳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같은 건실한 경제를 가져온 칠레의 국가전략은 극도화된 개발논쟁의 정치화를 하나의 방향으로 전환시킨 피노체트의 철권통치에서 출발하고 있다. 칠레의 엘리트들은 이 전략을 장기 실험기간을 거치면서

부작용을 치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으로 정착시킬 수 있었다. 이는 정치사회적 안정(security)을 바탕으로 경제적 번영(prosperity)을 추구한 피노체트의 국가전략의 면모였으며, 칠레의 대외개방형 시장 모델은 소규모 경제단위 국가의 발전전략으로 성공사례가 되었다. 다만 피노체트의 통치는 배제성이 강한 것이어서 결코 국민적 화합(harmony)에 기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노체트의 안정모델은 영구적일 수 없었다.

반면, 1990년대 민주화와 함께 정치경제적 과도기에 처했던 칠레의 엘리트들은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안정을 우선시한 점진적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국가전략의 기본틀을 유지하였다. 즉, 피노체트의 번영(prosperity) 모델을 강화하기 위해 민선 정부들은 글로벌경제에의 적극 참여를 시도하였으며, 독재정권 하에서 무시된 화합(harmony) 제고를 위해, 사회통합에 역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다만 여기서 문제시되는 것은 칠레의 첫 두 행정부 즉, 기민당(PDC) 계열의 에일윈, 프레이 대통령들은 화합전략이 안정(security)에 위해되지 않도록 피노체트 계열 정파를 고려한 매우 신중한 접근을 유지해왔으나, 2000년 집권한 사회당(PS)의 라고스 대통령은 피노체트의 면책특권 박탈이나 아옌테의 명예복권, 사회지출 확대 등을 시도함으로써 정치사회적, 경제적 불안이 증대된 점이다. 사회당 정권의 출현 이전까지 피노체트의 위상은 권좌에 있을 당시와 크게 다를 바 없는 특별한 지위에 있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정치적 안정을 의식한 과도기 민선정부들의 정치적 배려였으며, 이것이 권위주의 통치체도의 유산을 청산하지 못하는 한계이기도 하였다.

과연 사회당 정권의 권위주의 유산 청산 시도가 향후 칠레의 정치사회적 안정을 해칠 것인가? 그러나 이러한 국가전략상의 잠재적 위기가 반드시 불안과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냉전시기인 피노체트 통치시대와 1990년대초 냉전종식의 전환시기, 그리고 2000년대 글로벌시대의 각기 다른 국제정치경제적 환경이 또한 외부요인으로서 국가전략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20세기 말기에 좌파정권들이 남미나 유럽에 집권하

였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국가전략이 국제정치경제적 한계로 인하여 우파정권들의 신자유주의적 모델로부터 크게 이탈하지 않았음을 상기할 때, 칠레의 향후 국가전략 모델도 기존 모델을 지속 발전시키는 범위에 국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칠레의 국가전략은 정권의 교체 속에서도 정치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기한 특수한 경우로서 그 특징은 <표 7>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표 7> 국가전략 축과 국제적 환경의 시대별 특징

	피노체트 (1973 ~ 1990)	민선 1, 2기 기민당 (1990 ~ 2000)	민선 3기 사회당
정치사회적 안정	좌파, 노조탄압 → 공포 정치속 안정	정치적 과도기 신중, 타협 견지 → 안정 유지	피노체트 먼책박탈, 아 옌데 명예복권 → 리스 크 증가
경제적 번영	신자유주의 도입 → 시 행착오, 성장실현	신자유주의 유지, 지역 통합정책 → 성장지속, 국제금융위기 노출 제 한적	경제모델 제한적 수정 시도 → 경제 경착륙 시도
국민적 통합	무시	사회정책 강화	정책 역점
국제정치경제 환경	냉전시대 논리 → 피노 체트 지지	냉전종식, 과도기 → 모 델의 우위확인	글로벌시대 도래 → 모 델의 수렴동질화

다른 한편 칠레의 발전전략 수정과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은 개혁의 일관성에 기초하고 있다. 1970년대 당시의 개혁은 오늘날 동유럽이 겪고 있는 경제체제 전환과 같은 것이었으나 피노체트의 強權統治下에서 일사분란하게 진행되었다. 물론 칠레의 개방화 및 자유시장 경제개혁은 세계무역의 흐름이 여전히 보호주의 성향을 띠고 있을 때 시작되었고, 개발도상국 구조조정 지원이나 개혁의 선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시행착오와 비용을 치렀다. 즉, 1982~84년 금융위기가 도래했을 때 피노체트 정부는 다시 보호주의체제로 역행하다가 1985년 國內外的인 압력으로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복귀했다. 피노체트의 개혁은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의 대처리즘이나 미국

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레이거노믹스보다도 혁명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집행해나간 점이 특징이었다. 그의 신자유주의 실험이 당시 동시에 시작된 아르헨티나나 우루과이와는 달리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옌데 시절의 국가실패 경험이 자본가와 집권 엘리트간의 합의를 도출해냈기 때문이며 이에 저항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노조불법화에서 보듯 피노체트의 단호한 철권통치가 적용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피노체트 집권시기를 두 시기로 나눌 때 시카고 보이즈가 주도했던 1970년대와 이른바 지배자본가연합이 주도한 1980년대 중반이후의 신자유주의의 성격이 차별적이라는 점이다. 전기가 시장원칙에 충실한 정통신자유주의였다면, 후기는 전기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거시경제안정, 수출경제 확립에 초점을 맞춘 실용적 신자유주의라고 불려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도 실패 모델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이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합의의 정립, 그리고 일관된 개혁지속은 칠레의 구조개혁의 특징임을 발견할 수 있다. 피노체트는 인권유린의 장본인으로서 국내외적인 비난을 면치 못하면서도, 아직도 국내 자본가계층과 중산층으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성장과 권위주의 관계의 독특한 사례가 된다. 이를 가능케 했던 요소로는 칠레 정치의 특징인 기술관료(technocrats)의 역할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피노체트 시절의 시카고 보이즈는 최고 통치자의 비호속에서 거의 자율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노체트의 정치행태와 경제적 실적이 혼재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같은 시카고 보이즈의 역할이 민주화 이후 CIEPLAN의 전문가들에 의해 대체된 사실 역시 정권의 교체와 무관한 기술관료들의 지속적인 경제정책 운영을 가능케 한 배경이라고 해석된다. 특히 Teichman(2001, 91)의 지적처럼, Concertación하에서의 기술관료들은 자신의 “소속정당보다는 대통령과 정부에 충성함으로써” Pre-Pinochet 시대와 같은 극단의 정당분화 양상이 사라진 점도 경제정책의 안정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칠레는 장기간의 고성장 신화를 통해 중남미의 대표적인 신흥국으

로 인정받아 왔으며, 경제안정과 성공적인 외환관리로 페루 노동인력 수입국, 대아르헨티나 최대 투자국, 그리고 상술한 ‘관문정책’을 통해 브라질이 독점해온 지역협력의 리더로서 차별화되어 있다. 민주화 이후 칠레의 이같은 국제적 부상은 정치적 과도기의 신중한 잠재적 위기관리, 국가전략의 일관성 유지에 기초한 점진적 개선노력이 주효했다고 해석된다.

Abstract

Chile has been an exceptional case in the field of political economy of redemocratization and economic transformation. In Peru and Argentina in the 1980s, for example, redemocratization brought about populist economic policymaking aimed at fulfilling the explosion of expectations from the civil society. However, Chile's transition to democracy in the 1990s did not accompany such an economic turmoil, but maintained the same neoliberalism as the dictatorship of Augusto Pinochet had introduced in late 1970s and late 1980s. It was a paradox particularly because the same pre-Pinochet central-leftist and leftist regimes came back in the 1990s to the state power after Pinochet left.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the reasons why the pre-Pinochet forces accepted neoliberalism as their development model, and the way in which they still tried to differentiate their regimes from Pinochet's. As for the former, this paper focuses on the political economy of transition in late 1980s. The pre-Pinochet forces could not freely manage the political dynamics without winning the support of the private sector. The private sector never would trust them unless they accept the “practical” neoliberal development model. Thus the Concertación had to compromise at the price of their traditionally leftist causes. As for the latter, this paper analyzes the Concertación's policies in the external and

internal fronts. One is concerned with its active negotiation policy for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to further incorporate the interests of the private sector, and the other refers to its substantial programs to improve basic needs conditions for the poor and the underprivileged.

Key Words: Neoliberalism, Chile, Development Model, Regional Integration, Technocrat / 신자유주의, 칠레, 발전모델, 지역통합, 기술관료

논문투고일자: 2005. 01. 20

심사완료일자: 2005. 02. 01

게재확정일자: 2005. 02. 18

참고문헌

- Banco Central de Chile(1988), Boletín Mensual. No. 846, agosto.
- Butelmann, A. and P. Meller(eds.)(1992), *Estrategia comercial chilena para la década del 90. Elementos para el debate*, Santiago: CIEPLAN.
- Chile, Ministerio Secretaria General de Gobierno(1994), Mensaje presidencial, mayo.
- Chile, Ministerio de Planificación y Cooperación(1993), La internacionalización de la economía chilena: desafíos pendientes.
- Collier, Simon and William F. Sater(1996), *A History of Chile, 1808-199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ominguez, Jorge I. and Abraham F. Lowenthal(1996), *Constructing democratic governance: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n the 1990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Fernández Jilberto, Alex E.(1996), "Open Regionalism and Democratic Transition in Chile",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26, No. 4, Winter 1996-97, pp. 71-95.
- Flaño, Nicolás(1992), *On solid ground: Chile's economy today*, Apuntes CIEPLAN, No. 110, junio.
- Foxley, Alejandro(1993), *Economía Política de la Transición*, Santiago: Ediciones Dolmen.
- Irigoin Barrenne, Jeannette(1997), "Chile y el MERCOSUR en América Latina", *Diplomacia* No. 72, marzo-junio, pp. 31-34.
- Lagos Erazo, Jaime(1997), "El ingreso de Chile a APEC", *Diplomacia* No. 73, septiembre-diciembre, pp. 13-17.
- Meller, Patricio(1992), *Latin American Adjustment and Economic Reforms: Issues and Recent Experience*, Geneva: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 Muñoz G., Oscar, and Carmen Celedon(1993), "Chile en Transición: Estrategia económica y política", in Juan Antonio Morales and

- Gary MochMahon(eds.), *La Política económica en la transición a la democracia*, Santiago: CIEPLAN, pp. 119-147.
- Oppenheim, Lois Hecht(1999), *Politics in Chile: Democracy, Authoritarianism, and the Search for Development*, 2nd ed. Boulder: Westview.
- Rehren, Alfredo(1995), "Empresarios, transición y consolidación democrática en Chile," *Revista de Ciencia Política*, Vol. 17, No. 1-2, pp. 5-61.
- Riveros, Luis(1994), *Chile's Structural Adjustment: Relevant Policy Lessons for Latin America*, Tokyo: Economic Research Institute, Economic Planning Agency.
- Saavedra-Rivano, Neantro(1996), "Chile and Regional Integration", in Shoji Nishijima and Peter H. Smith(eds.), *Cooperation or Rivalry?: Regional Integration in the Americas and the Pacific Rim*, Boulder: Westview.
- Schiff, Maurice and Claudio Sapelli(eds.)(1996), *Chile en el NAFTA: Acuerdos de libre comercio versus liberalización unilateral*, Santiago: CINDE.
- Sáez, Raúl(1995), "Estrategia comercial chilena: ¿que hacer en los noventa?", *Estudios CIEPLAN*, No. 40, marzo, pp. 21-38
- Silva, Eduardo(1996), *The State and Capital in Chile: Business Elites, Technocrats, and Market Economics*, Boulder: Westview Press.
- Silva, Patricio(1991), "Technocrat and Politics in Chile: From the Chicago Boys to the CIEPLAN Monks,"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23, No. 2, May, pp. 389-391.
- Teichman, Judith A.(2001), *The Politics of Freeing Markets in Latin America: Chile, Argentina, and Mexico*,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Tarud, Jorge(1997), "Chile en el Asia Pacífico", *Diplomacia* No. 73, septiembre-diciembre, pp. 11-12.
- Toloza, Cristián y Eugenio Lahera(eds.)(1998), *Chile en los Noventa*, Santiago: Dolmen Ediciones S.A.